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3년 6월 19일(수) 조간
담당자	전홍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2-958-4201, htchun@kdi.re.kr)
배포일시	2013년 6월 18일(화) 09:30
배포부서	KDI 홍보팀(02-958-4030, press@kdi.re.kr)

# KDI, 동아시아 통합전략(III) 발간

## 통합 과정의 한국 리더십 제고 위한 전략적 과제 제안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 ·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외

- KDI는 동아시아 통합전략 연구의 3차년도 연구결과인 『동아시아 통합전략(III):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로운 도전』을 발간,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리더십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색함.
- 3년에 걸친 동아시아 통합전략 연구결과를 종합·정리한 이번 보고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아세안으로의 확대와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 동아시아 통합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향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 방안을 검토함.

※ 동아시아 통합 연구 1차 년도에는 동아시아 통합구상과 로드맵 및 한국의 역할, 2차 년도에는 한·중·일 통합 추진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한바 있음.

※ KDI는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구의 3년 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를 개최

□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생산망의 경제통합 촉진효과가 동아시아 FTA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확대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과 참여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심화를 위한 제도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개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및 동북아 경제협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함.

□ 『동아시아 통합전략(Ⅲ)』 연구는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KDI 겸임연구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이 총괄했으며,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박순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인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영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음.

❖ 첨부. 『동아시아 통합전략(Ⅲ)』 목차 및 장별 주요 내용

첨부.

## 『동아시아 통합전략(Ⅲ)』

### 제1부 동아시아 통합과 세계경제

#### 제1장 지표 분석을 통해 본 동아시아 통합 분석

-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제2장 지역생산망 접근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 박순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제2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

####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아세안

- 박인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제4장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

-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제3부 동아시아 통합과 새로운 도전

#### 제5장 세계경제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제6장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 연계

-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 · 이영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제7장 요약 및 결론

-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 ·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 지역생산망과 동아시아 FTA

-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의 중요한 동인인 생산 네트워크 형성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심화과정으로 간주됨.
  - 지역 생산망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촉진하며,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지역 생산망을 더욱 확대시키는 선순환 효과가 존재
  - 특히, 지역 생산망이 확립되는 경우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은 통상적 FTA의 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됨.
- 실증분석 결과, 국가 간 상호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 사이의 유의미한 선순환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생산 네트워크의 강화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FTA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남.
  - 국가 간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해당 국가 간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될 확률이 높으며, 역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 회원국 간 생산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됨.

**<표 1> 생산망 강화효과를 고려한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

(단위: %)

	생산망 강화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통상적인 경제적 효과		생산망 강화효과를 고려한 경제적 효과	
	GDP	후생	GDP	후생
한국	3.53	4.22	3.86	4.61
중국	0.44	1.28	0.67	1.59
일본	0.43	0.44	0.83	0.89
ASEAN	0.05	-0.09	0.26	0.15

주: 보고서의 <표 2-10>과 <표 2-11>을 재구성

- 한편 생산 네트워크의 강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경우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남.
  -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에는 FTA 체결을 통해 생산네트워크를 더욱 심화시킬 유인이 존재

## 2.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아세안

- 아세안은 동북아시아 3국에 비해 역량이 부족했음에도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서 주요 추진체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중국과 일본의 지역 내 패권경쟁과 한국 통상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동아시아 역내 리더십 및 조정자 부재에 기인
- 다양한 회원국 간의 느슨한 협력체제인 아세안이 전원합의체이던 협의방식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적용할 경우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조기실현은 어려울 것임.
  - 한·중·일이 주도하는 ASEAN+3 국가 간 금융협력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hiangmai Initiative Multilateral)를 결성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실천하는 데 반해,
  -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는 무역부문에서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아세안은 중국이 선호하는 ASEAN+3 형태나 일본이 선호하는 ASEAN+6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체라는 두 가지 정책대안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면서 중·일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함.
  -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을 인지하면서도 동북아 주도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될 경우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함에 따라,
  - 단기적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실현 또는 아세안 허브전략의 유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아세안은 현재 한·중·일과 맺은 양자 간 자유무역지대의 허브 역할에 충실하면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와 ASEAN+3 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3.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화 방향

#### □ 제도화의 기본 원칙

- 첫째, 참여국들의 정책 선호가 수렴하는 분야와 이슈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의제화할 필요
- 둘째, 거시적인 제도적 프레임워크보다는 분야별로 특화된 형태의 제도화를 추진
  - 정치적 비용이 낮고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그간의 협력 사례는 상대적으로 큰 제도화의 진전을 달성했음.
- 셋째, 동북아 3국 협력에 있어서 3국 협력 사무국의 역할 확대
- 넷째, 정부 간 협력의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다양성, 정책선호,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리스본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같은 초국가적 수준의 제도화는 현실성이 떨어짐.
  - 동아시아는 중층적이고 중복적인 지역협력체의 제도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점진적 제도화의 수준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제도화에 관한 전략적 방향

- 첫째, 동아시아 협력의 제도적 디자인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둘째, 경제분야에서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경제협력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셋째, 기존의 다양한 지역 협력체들의 제도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

#### 4.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산의 파급효과와 한국의 대응

-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맥락에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간 역학관계 변화의 요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세계경제의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한국으로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다자간 무역협상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리함.
- 세계경제의 향후 전개방향의 불확실성을 고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중 어느 쪽이 득세할지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가변성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적 대비가 요구됨.
- 한국은 동북아 FTA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특히 중·일 간 리더십 경쟁에 따른 리더십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 또는 한·일 FTA를 우선적으로 성사시켜야 함.
- 현실적으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 협상에의 참여도 도외시킬 수 없으나, 현 단계에서는 동아시아 FTA와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각각의 진행 속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

## 5.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

□ 동아시아 협력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협력 과정에 북한을 참여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정치·경제적 측면의 상시적 불안요인이나,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를 심화·확대하고 새로운 인프라 및 자원개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 및 한반도 종단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등 주요 협력사업의 키를 쥐고 있음.

□ 북한 대외 경제교류의 특징

○ 최근 북한 대외경제관계를 살펴보면, 무역 및 외자유치 규모가 미미하며 이마저 거의 모두 중국에 의존하는 극심한 편중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핵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중국 이외의 대안이 부재한 때문이지만, 핵문제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대외경제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다변화를 위한 수출시장 확대 및 인프라 건설에 요구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은 별개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동아시아 경제협력 차원에서 북한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동북아 경협을 이용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은 크게 역내 무역협력, 통화금융협력, 다자간협력 논의와의 연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무역협력논의 연계 방안

- 개성공단 등 북한특구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남북한 CEPA를 체결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북한특구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면, 북한은 수출시장확대 등 여러 혜택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됨.
- 남북한 CEPA가 성사되는 경우,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북한 지역에 대한 남한 및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증진되어 북한은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통화금융협력논의 연계 방안

-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공동기금 A3Fund와 동북아개발공사와 같은 지역개발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북한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건설 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참여를 유도

○ 다자간 협력논의 연계 방안

- 대륙 간 철도연결사업,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북·중 접경 지역의 남·북·중 공동개발사업 등은 관련국의 상호이익증진은 물론 한반도의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등의 추가적 효과를 산출

□ 남북한 양자협력은 물론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은 핵문제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추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비책을 강구해 둘 필요